

제3회 국회외교안보포럼
Korean Consensus

새 정부의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2025.7.16.수

10:00 ~ 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PROGRAM



제3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 일 시 : 2025.7.16.(수) 10:00~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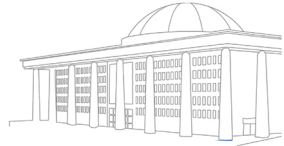
○ 주 최 : 국회외교안보포럼

○ 주 관 : 국회미래연구원

○ 일정표

시간	내 용	주 체
10:00~10:25 (25분)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개회사	국회미래연구원장
	축사	조경태 의원 (한미의원연맹 회장)
10:25~10:30 (5분)	사진 촬영 및 장내 정리	참석자
10:30~11:00 (30분)	[발제1] 새 정부의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前 외교부 1차관
	[발제2] 트럼프2기 경제통상 정책과 우리의 대응 방향	연원호 현대자동차그룹 GPO 글로벌경제안보실장
11:00~12:00 (60분)	[토론] 사회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토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건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에디터 박민희 한겨레 외교담당 선임기자	사회 및 패널

CONTENTS



제3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개회사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1
--------------------	---

축사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	5
----------------------	---

발제

발 제 1 새 정부의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교수 / 前 외교부 1차관	9
------------------------------------	---

발 제 2 트럼프2기 경제통상 정책과 우리의 대응 방향

연원호 현대자동차그룹 GPO 글로벌경제안보실장	21
---------------------------------	----

토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건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에디터

박민희 한겨레 외교담당 선임기자



제3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개회사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개회사



김 기 식
국회미래연구원장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반 년,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의 진폭 속에 새 정부의 한미관계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 환경과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역내 전략 변화에 대응해,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 안보,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정확한 분석과 정책대안의 마련은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제질서 전환의 시대, 정파를 넘어선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시기 국회는 지난 5월 「국회외교안보포럼: Korean Consensus」 출범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 거버넌스의 새로운 토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회 포럼에서 국제질서 전환을 둘러싼 원로 정책가들의 비전을 다룬 데 이어, 국회 외교안보포럼 3회 포럼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트럼프 2기 정부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외교, 안보, 경제통상 등 복합적인 현안과 미래이슈 대응을 위한 초당적 대화의 장을 준비했습니다.

〈새 정부의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포럼은 외교·안보 정책 경험이 풍부한 최종건 교수, 글로벌 산업 현장에서 경제안보를 이끌고 있는 연원호 실장(현대자동차그룹 GPO)의 발제를 시작으로 방미를 앞두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3당 위원들과 언론이 함께 패널을 구성했습니다. 패널 토론에는 김영배 민주당 국회의원, 김건 국민의 힘 국회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에디터, 박민희 한겨레 외교담당 선임기자가 참여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면해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경제협력의 전방위적 협상을 앞두고 현안에 대한 대응은 물론 중장기 전략적 방향성까지 오늘 포럼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새 정부의 한미관계 전략적 대응을 위한 토론의 자리에서 건설적인 공동 인식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외교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국회미래연구원장 김 기 식



제3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축사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

축사

조 경 태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사하을 조경태 의원입니다.

먼저「제3회 국회외교안보포럼 새 정부의 한미관계 : 비전과 전략」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신 국회외교안보포럼과 국회미래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한미 간에는 미묘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대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조기 귀국으로 무산되었고, 아직까지도 회담 일정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동맹 강화를 요청했지만, 미국 측의 반응은 “공감을 표했다”는 짧은 언급에 그쳤고, 공식적인 입장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과거 ‘철통 같은 동맹’, ‘빛 썰 틈 없는 공조’를 강조하던 시기와 비교할 때 분명한 온도 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국면에서 열리는 오늘의 포럼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는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을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70여 년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의 핵심축이자, 안보와 번영의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동맹은 결코 자동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소통과 신뢰 속에서 공고히 다져져야 합니다.

오늘 포럼으로 우리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의 일원으로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강화와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3회 국회외교안보포럼 새 정부의 한미관계 : 비전과 전략」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한미동맹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국회의원 조 경 태



제3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발제 1

새 정부의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前 외교부 1차관

새 정부의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前 외교부 1차관

1. 서론

□ 한미관계 관세 협상, 그 이면에는

-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단지 몇 %의 유예를 얻어내는 기술적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한미관계의 방향성을 다시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임.
 - 자유무역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미국은 동시에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은 '동맹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음.
 - '한미관계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회피하지 말아야 하며,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을 회복하는 새로운 기준과 기준선이 필요함.
 -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의 조건을 바꾸는 것과 직결되어 있음: 한미관계 설정에 따라 산업 공동화, 기술 주권, 지역소멸, 계층 간 양극화가 영향을 받을 것임.
- 미국과 '우호적 조율'이나 '자유무역의 당연함'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 더욱이 관세 문제는 단순한 무역 기술이 아니라, 미국 내 산업 보호주의와 국내정치적 계산이 결합된 향후 지속될 구조적 압박임.
- 이재명 정부는 워싱턴발 한미관계 재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순응 혹은 거부 할 수 없는 상황임.
 - 정부는 '우아한 가식' 보다 '비정한 이익' 시대가 도래했으며, 현재 국제정세, 미중관계 등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

- 정부는 동맹을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호 존중-분담-이익>의 원칙 위에 재설계해야 할 때임.
- 정부는 한미관계 미래에 대한 능동적 설계와 유연한 자율성 확보를 우선하는 한미 미래 비전 구축 필요

2. 상황평가 및 도전 요인

□ 국제정세 : 예전과는 다른 미국

○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의 지속성과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거칠어진 이기적인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마주쳐야 하는 상황임.

- (미국 예외주의와 일방주의) 미국의 예외주의가 일방주의 형식으로 구체화 되면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은 강화. ↳ 미국은 특별하다는 신념, 국제사회에서 자국이익만 추구
 - (공적 패권의 후퇴) ‘공적인 패권’을 담당하던 미국은 이제 과거의 모습에서나 찾을 수 있음. ↳ 국제안보-다자주의 리더십, 글로벌 경제-보건 지원, USAID폐쇄, 파리기후협정 파기등
 - (당연한 것들의 위기) 민주주의, 자유무역, 다자협력, 동맹, 지역통합 등 국제사회 규범과 원칙들이 더 이상 ‘자명한 전제’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
 - (미 패권 영향력 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휴전/종전 지연, 중동지역의 고질적 불안정 등 미국 패권의 제한적 영향력 도출. ↳ 이스라엘의 대이란 독자 군사행동, 이란핵문제의 협상 불확실 등.
 - (힘을 통한 평화 관념의 확산)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및 일부 국가들은 ‘힘을 통한 평화’를 표방, 강한 억지력을 통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기조 증가.
- 미국의 동맹관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패권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인식下 동맹국들에게 환불 혹은 보상 요구를 당연시하고 있음.
- (비용으로서의 동맹)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은 비용’이라는 시각과 ‘협력보다 거래’라는 접근을 통해 자국 이익 우선의 전략을 강력히 전개 중.

- (전방위적 요구) 미국은 통상(관세), 기술(수출 통제), 안보(방위비 및 전략 동조), 에너지(LNG 구매), 심지어 환율 조정, 디지털 통상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요구를 동맹국들에게 전달하고 있음.
- (조건부 전략적 우선국) 동맹의 협력을 요청하기 보다는 미국의 조건을 수용해야 동맹의 지위와 혜택을 부여한다는 **거래적 압박 구조**를 연출.

⇒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에 대한 예외 없이 ‘가치’보다 ‘이익’, ‘연대’보다 ‘거래’, ‘글로벌 리더십’ 보다 ‘국내 정치의 유불리’를 중심으로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음.

□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 미중 전략경쟁은 공급망과 기술, 산업과 안보가 얹힌 복합전선의 경쟁체제로 전환, 국가안보의 프레임 안에서 시장과 자원의 구조적 분리 과정에 접어들고 있음.
 - (미래패권) 미중관계의 불안정은 단순한 무역 불균형이나 환율 문제가 아님. AI, 반도체, 양자기술, 배터리, 클라우드·데이터 인프라등 미래 패권 경쟁임.
 - (기술통제 vs. 자립화) 미국은 기술 통제를 통해 중국의 산업 성장을 제어하고자 하며, **중국은 자립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음.
 - ↳ <중국제조 2025>완결과 <중국제조 2035>추진
 - (상호억지) 미중관계의 구조는 서로에 대한 상호의존성과 무역상의 보복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상호 억지의 경제 관계’**임.
 - ↳ 규제하면 보복을, 제재하면 우회를 시도하는 반복 구조
 - 최근 미중간의 관세 조정 관련 합의(일명 제네바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미중관계의 정상화는 아님.
 - 겉으로는 확전을 피하면서도 물밑에 **기술 통제, 공급망 분리, 투자제한, 정보 보안분야의 본격적인 충돌을 위한 숨고르기 상태**로 보임.
- ⇒ 군사분야의 긴장관계는 적절히 관리하면서, 미래 패권의 장악을 위한 현재의 기술통제와 자립화, 공급망 진영의 재편 등으로 미중경쟁은 진행 중.

□ 한미관계

- 미국은 동맹국인 우리에게도 관세, 공급망 통제, 기술 규제, 방위비 증액 등 과거 그 어느때 보다 거칠고 포괄적인 요구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

↗ 노무현 정부(07.06월 협정문 서명), 이명박 정부(12.03월 효력), 문재인 정부(19.01월 개정 발효)

- (자유무역 종식) 민주정부 2기에 체결되고 4기에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은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종식.

↗ 24년기준 : 한국 2.8%, 영국 2.3%, 독일 1.7%, 일본 1.8%

- (동맹비용 요구) 한국은 GDP 비율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비 지출 중이며 동맹국들 중에서도 현금과 병력 기반 공헌도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분담금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음
- (관세와 안보 연계) 더 나아가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관세 협상과 연계하여 안보와 통상을 하나로 묶어, 그간 포괄적 동맹으로서의 한미관계를 재설정
- (전략적 자율성 시험) 아울러 미국은 미중 전략경쟁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연대를 명확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도전이 될 것임. ↳ 05.31일 미국방장관 연설中 “중국과의 경제 협력,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경고

□ 과거와는 다른 미국

- 한미관계를 규정했던 양자 자유무역체제의 종식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는 미국의 대외경제 및 안보정책에 더욱 민감한 상황이 되었음.
- (포스트 한미FTA) 현재 관세 협상은 세율 조정이 아닌 우리나라 미래 경제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하에 대응해야 할 것임.
- 단순히 미국의 압박을 모면하기 위한 대미투자 증가가 미래 핵심산업 경쟁력 저하, 지방소멸 가속화, 산업공동화, 청년 일자리 양극화의 결과를 도출할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해야 할 것임.

3. 이재명 정부의 외교전략과 한미 미래비전 제언

□ 국익 중심 실용외교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적 합의는 미국에 대한 감정적 외침이 아닌 문제해결형 대미정책이며, 전체 외교안보 전략의 재구성임.

- (양극단의 배제) 국내에서 존재하는 두 극단 (미국에 대한 맹신과 불신)은 반시대적이며, 오늘의 국제정세를 오인하게 만드는 위험한 시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문제해결에 공헌 할 수 없음.

○ 지금은 ‘실용’이 국가전략의 핵심 기제로서 명확히 정립되어야 함. 외교는 선언(declaratioin)이 아니라 설계(plan), 수사(rhetoric)가 아니라 선택(choice), 이상(ideal)이 아니라 성과(performance)로 평가받아야 함.

／경제(현재와 미래 먹거리), 안보(평화와 안정), 자존(역사적 정체성)

- 외교의 출발과 귀착점을 **국가 이익**에 두고, 그 실현 수단은 현실을 직시하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외교 전략을 의미해야 함.

- 실용외교는 외교안보환경의 복잡성 안에서 우리의 원칙과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을 선택하는 실행력의 문제임.

-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다음 세대의 기회와 안정, 그리고 국가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어야 함. **(무엇과 누구를 위한 실용?)**

- 주변국과의 안정적 외교와 외교 다변화를 통한 대미-대중 의존도를 낮추면서 우리의 다중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할 시점임.

⇒ 과거의 유산이나 원칙에 기대 대미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역사, 그리고 치밀한 이해의 계산” 위에서 새롭게 동맹관계를 설계해야 함.

□ 친중과 반중을 넘어서는 한중관계

- 미국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한중관계는 철저히 계산되고 설계된 관계여야 함.
 - 한중관계를 한미관계와 미중관계의 종속변수로 두게 되면 우리의 외교적 입지와 대미 레버리지가 약화됨.

／전체 수출입 중 약 19.7%차지

- 중국은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 대상국으로, 반도체, 배터리, 정밀화학소재 등 첨단 산업의 중간재·원자재 공급망 확보, 한반도 비핵화, 안보리 제재이행, 동북아 역내 안정 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관여해야 할 핵심전략상대국임.
 - 특히 미중 경쟁下 한국이 중국과의 외교를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며 협력적으로 유지할 때, 공급망 안정성, 수출시장 확보, 역내 외교공간 유지 등 국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예: 중국이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실시 할 때, 사전조율과 대응협의 채널 유지 여부가 기업 생존과 직결).
 - 결국 한국 외교는 경제적 연계(무역, 투자, 기술 이전)와 지역 전략 환경(북한, 동북아 안정, 공급망 협력)을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분법이 아닌 연계된 현실로 인식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 미국과 중국의 의존을 낮추는 외교다변화

- 외교 다변화를 통해 시장 확대와 공급망 다양화로 대미·대중 의존도를 완화하여 자율성 강화.

／24년 제2대 교역파트너(16.7%) ／미국의 전략적 뒷마당

- 아세안, 인도, 중앙아시아, 중남미 국가들과의 외교 및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 및 수출 다변화와 원자재 공급망 확보.
- 미·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 기반 마련하여 한국 경제안보의 기반을 구축하는 구조적 해답임.

□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

○ 외교부, 산업부, 기재부, 통상본부가 각자 대응하기 보다 경제안보 컨트롤타워가 범부처 통합 전략으로 작동해야 함.

- 외교부는 해외 공급망 협력을 총괄하고, 산업부는 기술 보호와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맡으며, 통상교섭본부는 국제 무역협정과 무역장벽 대응을 주도해야 한다.

- ‘외교 없는 산업정책’, ‘통상 없는 외교정책’으로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산업전략과 외교전략이 일체화된 **경제적 국력외교(economic statecraft)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함. ↳ 국가가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 (무역, 투자, 원조, 제재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

□ 대미 공공외교 강화

○ (트럼프 진영 네트워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싱크탱크, 공화당 내 영향력 인사, Fox News 계열 인플루언서 등 트럼프 생태계의 결정구조를 파악하고 접근 채널을 다변화 필요.

○ (기업외교 및 민관 파트너십 확대) 미국 내 로비 경험이 있는 대기업 CEO와 법률 자문단, 그리고 주(州) 단위 정치·경제 인프라와의 관계를 활용해 민간 차원의 설득과 압력도 병행.

- 트럼프식 고관세 정책은 **연방정부 단위의 보호주의**이지만, 실제 투자는 주정부가 결정적 역할을 함 (예: 조지아주, 테네시주, 텍사스 등).
- 정부는 중앙 외교 외에, **주별 맞춤형 경제외교팀**을 운영하여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고관세 정책이 한미간의 경제협력에 저해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미국 현지외교**를 병행해야 함.

○ (국회 및 초당적 외교 네트워크 활성화) 한미 의원외교포럼, 공화·민주 양당 인맥을 활용한 양자 및 다자 입법 외교를 적극 가동, 트럼프 외교 변동성의 완충장치 마련.

□ 한미정상회담 대화법: 트럼프 1기를 반추해 보니

○ 트럼프는 한국을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고 경제적 대가를 받아야 하는 동맹’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주한미군 재배치 언급, 무역흑자 개선 요구

- (대통령 중심의 톱다운 외교 체계 구축) 트럼프는 대통령 간 직접 관계를 중시. 한국 대통령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파트너’라는 이미지 각인 필요.
↳ 국내지도도, 의회 다수당 확보 등
- (구체적 수치) “왜 미국에게는 한국이, 한국에게는 미국이 필요한가”를 구체적인 투자, 고용, 기술, 안보 기여도등의 수치로 입증하고, 트럼프의 정치적 목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
- (도움주는 나라)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 파트너, 인도-태평양 전략의 군사적·산업적 전진기지, 미국 방산기업과 가장 활발히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나라이며 한국은 ‘미국에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라는 인식 전환을 이끌어야 함.
- (성과 중심 외교 언어 사용)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 노동자를 얼마나 고용시키는가?”, “미국 내 제조업 부활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중심으로 서사를 재구성 필요.
*예: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는 일자리 X만 개 창출”, “미국 공장 설립으로 특정 주(州) 지지층에 실질적 효과” 등.
- (트럼프의 심리와 언어에 맞는 소통) ‘공정한 거래’, ‘위대한 협상’, ‘강한 지도자’ 같은 단어에 반응하는 트럼프식 수사에 맞춰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소통.

4. 결론

□ 한미관계 방향성

○ 한미동맹은 명확한 방향성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미래구상은 있는가?) 방위비, 통상 이슈 등 각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방향성 있는 미래 구상 위에서 대응해야 함
- (속도 보다 방향) 이재명 정부는 단기적 성과나 외형적 속도에 집착하기보다 일관된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 동맹 발전 전략을 펴나가야 함.
 - ↳ 상호호혜주의, 민주주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등
- (적극적 관여) 동맹의 본질은 상호 신뢰와 미래 비전의 공유에 있으므로 워싱턴발 정책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을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것임.
 - ↳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 주한미군 감축說, 대북정책, 관세조율 등
- (동맹과 자율성) 안보·경제·기술·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의 요구와 한국의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 잡힌 조율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한미관계 미래비전의 핵심임.

☞ 한미관계의 미래는 단순한 동맹 유지가 아니라, 자율성을 겸비한 실용적 파트너십이 되어야 함. 경제·기술·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적 선택을 추구하되, 동맹의 요구와 한국의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 잡힌 조율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한미관계 미래비전의 핵심.

☞ 한국은 단순히 안보를 제공받는 수동적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산업·안보에 기여하는 능동적 파트너. 방위비, 통상, 기술이전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실익에도 부합하는 상호주의적 접근을 설계해야 하며, 동맹은 더 이상 일방적 요구와 수용의 공간이 아니라 공정한 교환의 틀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한미 미래비전 설계에 올바른 방향이 될 것임.

//끝//



제3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발제 2

트럼프2기 경제통상 정책과 우리의 대응 방향

연원호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제안보실장

국회외교안보포럼

트럼프2기 경제통상 정책과 우리의 대응 방향

연 원 호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제안보실장

2025. 7. 16

트럼프 2기 경제통상 정책과 우리의 대응 방향

America First Trade Policy (2025.1.20)

America First Trade Policy Memorandum

	1. 미국 중심 공급망·제조 기반 재편	시행여부
	• 리쇼어링 추진: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국내 생산 전환	○
	• Section 232 확대: 전략산업 수입 제한·조사 범위 확대	○
	• Buy American 강화: 연방 조달 국산 우선, 외국 보조금 왜곡 시정	○
	• 투자 유인: 세제 인센티브·물류·인프라 현대화	○
	2. 공세적 통상 전략 — 관세·협정 재설계	시행여부
	• 글로벌 추가관세 활용: 무역적자 해소, ERS 설립, de minimis 축소	○
	• FTA/WTO 탈퇴: 상호주의 미달 조항 개정·탈퇴 옵션	△
	• 대중 압박 패키지: 301조 관세·PNTR 철회·우회수입 차단·IP 보호 강화	○
	• 불공정 행위 제재: 환율조작·보조금 국가 지정, AD/CVD·서비스 제한	X
	3. 경제안보 중심 기술·투자 통제	시행여부
	• 수출통제 업그레이드: 첨단기술 수출통제 강화를 통한 기술이전 차단	○
	• Outbound 투자 심사: EO 14105 강화, 중국 투자 제한	○
	• 공급망 위험 평가	○
	• 마약·불법이주 문제 해결: 관세를 활용	○

트럼프 2기 경제통상 정책과 우리의 대응 방향

트럼프 2.0 경제 · 산업정책

①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② 공급망 '리쇼어링'
가속화③ 경제 자립성과
물가 안정 동시 달성(2025.4.29) <https://abcnews.go.com/US/full-transcript-trumps-exclusive-100-days-broadcast-interview/story?id=121291672>

3

트럼프 2기 경제통상 정책과 우리의 대응 방향

트럼프 2.0 관세

"Escalate to De-escalate"				
	발표	발효	원인	내용
㉔	2/1	3/4	불법이민 펜타닐	캐나다와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은 10% 관세)
	2/3		-	캐나다와 멕시코와 협상, 관세 시행은 3월 4일까지 30일간 유예
㉔	2/4	2/4	펜타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
㉕	2/10	3/12	국가안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 25%
㉔	3/4	3/4	펜타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기존 10%에서 20%로 인상
	3/6		-	USMCA 기준 총축 상품에 대해 4월 2일까지 25% 관세를 유예
㉕	3/26	4/3	국가안보	모든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5/3까지 발표)
㉖	4/2	4/5	불공정 무역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고 명명,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10%의 최소 관세 부과
	4/2		-	USMCA 기준 총축 제품에 대한 관세 유예 무기한 연장
㉔	4/9	4/9	불공정 무역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125%로 인상 → 기존 관세와 합산 되어 총 145%의 대중국 관세를 적용
	4/9		-	7월 8일까지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기존 10%만 적용)
	4/11	4/5 (소급적용)	-	전자제품 제외 조치 발표 (단, 중국산 전자제품은 20% 관세 유지)

자료: 연원호 (2025) / ㉔ country specific tariffs ㉖ reciprocal tariffs ㉕ universal baseline tariffs

4

트럼프 2기 경제통상 정책과 우리의 대응 방향

트럼프 2.0 관세

“Escalate to De-escalate”				
	발표	발효	원인	내용
	4/29	4/3 (소급적용)		2027.4.30까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 (1년차 미국산 차량 MSRP의 3.75%, 2년차 2.5% 환급)
	5/8			미·영 무역합의 발표
	5/9			중국산 관세 145% → 80%로 낮출 가능성 언급
	5/12			미·중 90일 관세 휴전...미국 대중 관세 총 30%
	5/28			CIT 법원 IEEPA 관세 무효 판결
㉠	5/29	-	불법이민 펜타닐 불공정 무역	정부 항소로 IEEPA 관세 유효 유지
	6/4	6/4	국가안보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
㉡	6/11			미·중 런던 협의, 희토류↔중국인 유학생
㉢	6/12	6/23	국가안보	철강관세 대상 가전 확대 (냉장고, 세탁기 등)
	6/16	6/16		미·영 무역협정 발표: 자동차·우주항공 관세 인하

자료: 연원호 (2025) / ㉠ country specific tariffs ㉡ reciprocal tariffs ㉢ universal baseline tariffs

5

트럼프 2기 경제통상 정책과 우리의 대응 방향

Lighthizer NYT Op-ed, 202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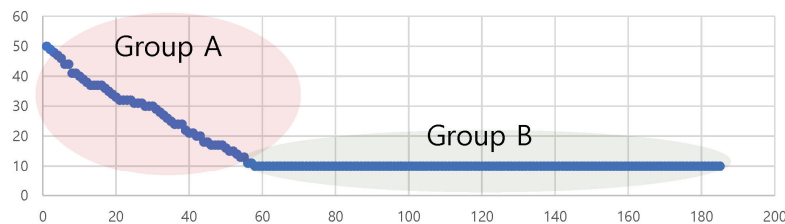
새로운 무역 체제 제안: 두 개의 관세 체계와 '조정관세' 도입

1. 높은 관세 그룹 (A):
 - 비민주주의 국가, 지속적으로 과도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 부과 (e.g. 중국)
2. 낮은 관세 그룹 (B):
 - 새로운 무역 체제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국가 및 자유 경제 국가들간 적용

❖ Reciprocal Tariff Calculation (USTR, 2025):

$$\Delta\tau_i = \frac{x_i - m_i}{\varepsilon * \varphi * m_i}$$

$\Delta\tau_i$: change in the tariff rate
 x : export to country i
 m : import from country i
 ε : price elasticity of import demand, is set at -4
 φ : tariff elasticity of import prices, is set at 0.25

자료: <https://ustr.gov/issue-areas/presidential-tariff-actions>; White House. Updated on 7 April 2025

6

트럼프 2기 경제통상 정책과 우리의 대응 방향

미일 협상에서 일본의 오판이 주는 시사점

미일 관세 협상 동향

초기	1차 (4/16일)	▷ 24%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25 % 車·부품 및 철강·알루미늄 관세 전면 철폐 요청 ▷ “조속한 해결을 위해 추가 회담 개최”에만 합의
	2차 (5/1일)	▷ 25 % 車·부품 관세 “재검토 (=철폐)” 재요청 ▷ “외환·방위분담 등은 논의 안 됐다”는 설명만 남아 사실상 입장 확인 선에서 종료
중기	3차 (5/23일)	▶ 미국산 무기 구매, 조선 관련 공동사업 제공 ▶ 車 인증 절차 완화 + 옥수수·대두 등 농산물 추가 수입 제시
	4차 (5/30일)	▶ 3차 협상안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및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묶은 패키지 제안을 공식화
후기	5차 (6/5~7일)	▷ “기여도 연동 감축” 제안 - 日 업체의 美 현지생산·역수출 비중에 따라 車 관세 단계적 인하 ▶ 방산장비·농산물·선박 기술 패키지 계속 제시
	6차 (6/13일)	▷ 표면적으로 ‘철폐’를 1순위로, 그러나 실제 협상에서는 기여도-연동 단계 감축안을 유지 ▶ 현지부품비율 상향, LNG·농산물·방산 구매 확대, 희토류·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카드 검토 계속
	7차 (6/27~29일)	▷ “기여도-연동 감축” 제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美 적자 해소 카드가 핵심으로 격상 ▶ 7/2일 이시바 총리, “투자·수입 확대를 통해 美 적자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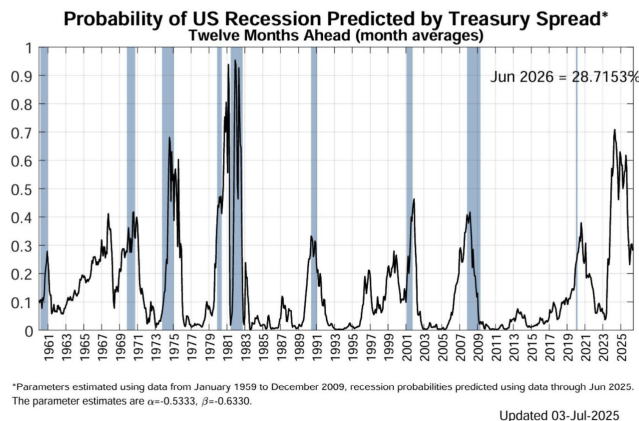
➢ 일본, 에너지·농업·방산 분야에서 미국이 체감가능한 무역적자 감소에 기여하고, 관세 전면 면제가 아닌 단계적 완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

7

트럼프 2기 경제통상 정책과 우리의 대응 방향

“Trumpcession”

- 2025년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확률 약 30%로 높은 수준
- 뉴욕 연방준비은행(FED)의 공식 전망은 2025.7.7 기준 30%
 - 5월29일 별도 보고서에서 수정된 예측모형(장단기 스프레드 + 단기금리 편차 포함)은 현재 침체 확률을 약 75%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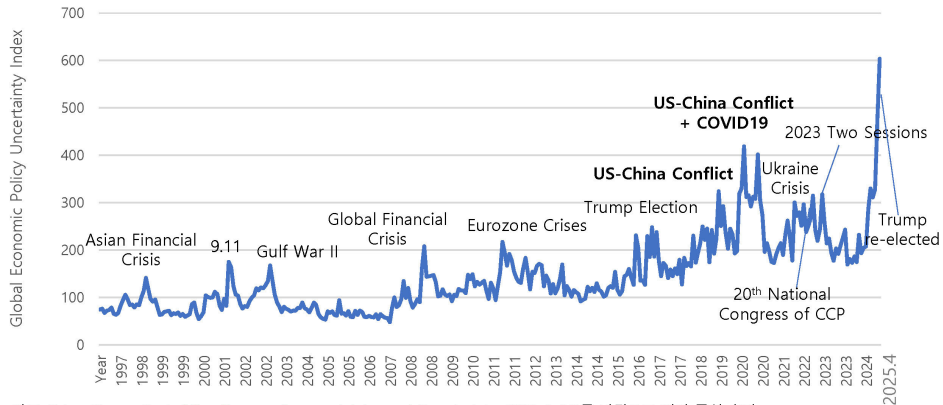


※ 장단기 금리차가 0% 이하로 역전될 경우, 특히 -0.3% 이하로 일정 기간 지속되면 향후 6~12개월 내 침체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 (2025.7.7 현재) 국채10년물 금리 - 3개월 스프레드 = 4.37%-4.35% = 0.02%

8

트럼프 2기 경제통상 정책과 우리의 대응 방향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자료: Baker, Bloom, Davis. <https://www.policyuncertainty.com/> (Search date: 2025. 6. 10)를 바탕으로 저자 주석 추가

- 금융위기가 아닌 정책변화 주도의 불확실성
 - 새로운 정책 방향과 규칙 제정이 핵심 변수
 - 불확실성은 '행동에 대한 세금'으로, 기업들의 투자·소비·고용 결정을 보류시키고 있음
- 세계화의 후퇴, 리쇼어링 강화, 공급망 재편 등은 기업의 투자 전략/운영모델에 구조적 영향

감사합니다



제3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토론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 건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준형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에디터
박민희 한겨레 외교담당 선임기자

제3회 국회외교안보포럼
Korean Consensus

새 정부의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